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기준 고무줄

5년간 3회이상 위생법위반업체 2982곳 담배꽂초·지렁이 나와도 '시정명령' 이물혼입 1366건 중 영업정지 7건 불과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2,982개 1만6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물혼입 위반건수는 1,366건이었지만 89%에 해당하는 1,215건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치에서 청개구리와 메뚜기가 나오고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와도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처벌기준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

거지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2,982개(1만602건)이며 이중 5~10회 위반은 308개(1,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개(3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 1만 602건 중 이물 혼입 위반은 1,366건으로 13%를 차지했으며 89%에 달하는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고 품목제조정지 6건,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13건, 16건이었다.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5년간 53건, 이 중 94.3%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평균을 상회했다. 오리온, 삼양, 동원 등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물혼입 위반 건수가 많은 대부분의 업체들도 90%에 가까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상습적 위반에 대해 처벌수준이 너무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담배꽂초, 유리조각, 각종 벌레, 예벌레, 비닐, 손톱을 비롯해 개구리, 지렁이 등 다양한 이물혼입 위반사례와 이유식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플라스틱이 혼입 위반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이물질 종류에 대한 처벌기준이 '고무줄 기준' 아니냐는 비판과 적절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질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10,602건을 위반 행위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 1,366건, 청소년 주류 제공 537건, 성매매알선 125건, 건강진단 미실시 73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18건이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이해숙, 국주영은 의원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한 목소리

양용모·이해숙·국주영은 도의원 릴레이 간담회 진행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이해숙, 국주영은 의원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의원은 17일 도내 각급학교 운동부 지도자 100여명과 전주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과 처우개선 문제, 지도자등급제 문제점 등을 토론했다.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 엘리트체육 지도자로 농구, 육상, 양궁, 수영 등 254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운동부 지도자들은 1년이나 11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항상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열악한 근로여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익산의 A학교 지도자는 "새벽 05시부터 운동부 선수들과 일과를 시작해 낮 수업시간을 빼고 야간훈련까지 마지면 밤 10시가 된다"며 "아이들이 잠들어도 각종 안전사고까지 걱정하며 24시간을 운동부 지도에 바치고 있지만, 고작 150만원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 운동부 지도자들은 소년체제이나 전북체전 등의 메달 성적을 근거로 A,B,C등급으로 구분해 월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도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제도라며 시급해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관계로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지급되지 못한 사례도 많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한 여러 지역의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청소, 학교잡무 등을 처리할 것을 지시받는 경우도 많으며 학교장과 교사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논란이 된 지도자등급제에 대해 토론회를 주관한 양용모 의원은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등급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한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논의가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난방송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 전주방송, 전북CBS, 티브로드 전주방송, CJ헬로비전전북방송, KCON금강방송, TBN 전주교통방송 등 도내 8개 방송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긴급재난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도민에게 전파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업체약을 맺고 있다.

고향기부제 초읽기... 지방분권 이뤄낼까

양성민 도의원, 도입시 분석결과 최대 3조 지방재정 유입 전망

고향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건에 이르며, 각각 기부·납세형식, 기부자 범위, 기부대상지역, 답례품 제공 여부 등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양성민 도의원

먼저 기부·납세형식에 대한 논의다. 발의된 10건의 법안 중에서 총 7건이 기부금 형식을, 3건이 소득세 이전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

기부금 형식은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식인 반면 소득세 이전 형식은 별도 금액을 기부하지 않고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 즉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누가, 어느 지역에 기부 또는 납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

황이다. 황주홍의원은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호영의원은 본인의 출생지역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으로, 전제수, 김두관의원은 재정자립도 20%이하, 30%이하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상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이외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기부자범위, 기부대상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법안도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낸다는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한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답례품 제공에 대한 부분이다. 김광림, 이개호의원은 해당지역에서 기부·납세자에게 지역의 농특산물 또는 기념품 등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성민의원은 "‘고향기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유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에서 3조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

쿨루프 설치건물 전기요금 68만원 줄어

전북도가 올해 여름 추진했던 '쿨루프(Cool Roof)' 사업 효과는 얼마나 있었을 까.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68만원을 절약했고, 30년생 소나무 66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는 올해 여름 9곳의 도내 지역아동센터 건물 옥상에 쿨루프를 설치했던 사업효과를 발표했다.

쿨루프는 차열페인트를 도색해 햇빛과 열을 반사해 열기가 건물옥상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쿨루프 효과는 눈에 띌 정도로 나타

났다.

건물옥상 표면온도가 쿨루프가 미설치된 인근의 건물보다 14도~28.7도로 감소되는 등 폭염 대응에 탁월했다.

또 전년도와 전기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17.7%(2438kW)감축됐다.

도 친환경 환경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에너지절약 사업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